

2000년 국내 경제전망과 경제운영 방향

김 창 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 최근 경제동향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지난해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우리 경제가 급년들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상반기중 빠른 회복세를 보인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3/4분기 중에는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IMF이전 수준(80.1%)에 가까운 79.1%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4분기 4.5%, 2/4분기 9.9%의 증가세를 보인 國內總生産(GDP)이 3/4분기에는 12.3%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저성장애 대한 반등효과와 99년 1/4~3/4분기의 9.0%의 성장률 중에서 재고의 기여도가 5.1%를 차지(<표-1>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의 규모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실물경기지표의 호전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 8월 이후 실물경

기지표의 증가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의 급속한 경기하강 국면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경기회복세와 함께 고용사정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일용 및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등 고용구조가 IMF이전에 비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2/4분기 이후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10월에 4.6%를 기록, 2월의 8.6%를 정점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

물가도 국제유가 상승(두바이産 油價(\$/bb1) : 10.68(98년말) → 23.97(99. 11. 23))으로 8월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연간 1% 이내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400억달러를 넘는 흑자규모를 보인 경상수지도 꾸준한 수출신장세에 힘입어 200억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 및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금년 8월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금융시장도 채안기금 설치 등 일련의 시장안정 조치에 힘입어 장기금리가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등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는 점, 그리고 채안기금 외에는 마땅한 채권 매수세력이 없

<표-1> 재고의 성장기여도 추이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4~3/4
재고증감(%)	0.6	-2.0	-5.6	5.1
GDP (%)	6.8	5.0	-5.8	9.0

다는 점 등 금융시장에 내재해 있는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월 24일 회사 채수익률(3년물)은 오전중 한때 10%대에 진입했으나 채안기금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9.75%로 마감하는 등의 상황은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인위적인 금리인하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공급 우위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불안요인 등으로 지난 7월 하순 이후 1,200원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움직이고 있던 환율도 11월들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급격히 절상되고 있다.

2. 2000년 경제전망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의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가?

우선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자.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일본, 아시아지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고 엔화도 일본의 경기회복으로 강세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급격히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도 이라크의 수출재개 움직임과 세계 원유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걸프협력회의 6개국 정상들이 최근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로 다짐하는 등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대외여건은 긍정적이다.

대내적인 여건을 살펴보자. 우선 재정정책은 외환

위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다한 역할을 한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목표를 금년의 4% 내외에서 3.5%로 합의했다.

통화정책도 당분간 저금리 정책기조가 이어지겠으나 향후에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면 이를 다루기 위한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긴축이 대세인 듯하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진행중이고 이제 막 응급치료를 받고 기사회생한 우리 경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내년도 정책의 긴축기조는 지난해와 올해의 확대기조를 완화하는 수준에서의 완만한 긴축 정책이 예상된다. 또한 대우사태로 야기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물경제 위축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비교적 긍정적인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6%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표-2>) 이와 같은 성장추세는 기술적인 반등효과나 재고효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금년(9%대) 보다는 낮으나 우리의 잠재성장률(5~6%)에 근접하는 안정적 성장세로 평가된다.

최종수요를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부문이 임금 상승, 실업률 하락, 자산시장의 회복세 등으로 6% 내외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설비투자의 경우, 대내외 수요의 회복으로 실물부문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수익성도 개선됨에 따라 성장률을 상회하는 9.6% 내외의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상반기중에 큰폭(10.8%)의 감소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하반기 중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겠으나 경기회복 지속에 따른 건설수요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중에는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될 전망이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국면, 엔화강세 기조에 따른 반사이익 그리고 통화위기에서 벗어

〈표-2〉 국내 경제 전망 (1999년~2000년)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1998	1999					연 간	2000 전망
		1/4	2/4	3/4	4/4			
국내 총생산	-5.8	4.5	9.9	12.3	10.2	9.3	6.4	
(제조업)	-7.2	10.3	20.4	26.8	20.3	19.5	8.7	
총 소비	-8.2	5.1	7.4	8.5	8.1	7.3	6.0	
민간소비	-9.6	6.3	9.1	10.3	9.9	8.9	6.6	
고정자본 형성	-21.6	-4.1	5.2	8.8	6.5	4.4	7.2	
설비투자	-38.3	12.9	37.2	48.0	41.0	34.7	9.6	
건설투자	-10.2	-13.7	-8.5	-10.0	-8.1	-9.9	5.6	
재고변화/GDP (%)	-8.0	-4.4	-5.0	-5.8	2.6	-3.0	-2.0	
생산자 물가	12.2	-3.5	-3.3	-1.9	0.4	-2.1	2.6	
소비자 물가	7.5	0.7	0.6	0.7	1.5	0.9	3.3	
경상수지	405.6	61.9	63.8	66.4	57.1	249.2	94.6	
상품수지	416.3	67.8	80.1	71.9	68.9	288.6	145.6	
수 출	1,321.2	314.8	357.3	364.6	414.2	1,450.9	1,530.2	
증가율(%)	-4.7	-3.7	3.8	16.0	23.2	9.8	5.5	
수 입	904.9	247.0	277.2	292.7	345.4	1,162.3	1,384.6	
증가율(%)	-36.2	7.6	20.8	40.5	45.4	28.4	19.1	
서비스, 소득 & 이전	-10.7	-5.9	-16.3	-5.5	-11.7	-39.4	-51.0	
원화 환율 Won/\$	1,204.0	1,227.0	1,157.0	1,216.0	1,150.0	1,150.0	1,100.0	
엔화 환율 Yen/\$	113.4	119.0	121.0	106.5	103.0	103.0	100.0	
회사채 수익률(%)	15.1	8.4	8.0	9.9	9.6	9.0	10.5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회복으로 내년 중에도 6% 내외의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수입은 배럴 당 22달러 내외의 고유가, 내수확대 등으로 증가율이 2000년 중에도 18.3%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25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00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역시 예상보다 빠른 실물 부문 회복과 정부 실업대책에 힘입어 내년 중에도 개선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 내외로 안정세를 보인 물가의 경우, 내년중 재고증감을 제외한 총수요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3~4% 내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총수

요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임금 오름세 등 각종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물가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2000년중 3.5% 전후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금리의 경우, 정부의 금리안정화 노력으로 하향 안정되고는 있으나 내년중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 투자부문 등의 자금수요 증가와 물가상승 등이 예상되고 있고 불안정한 채권시장의 수급상황으로 인해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환율은 국제시장에서 엔화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내년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달러 공급우위의 외환수급 구조를 보이면서 완만한 절상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거시경제 운용과제

'98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우리 경제가 올해에는 성장률 9%대, 인플레이션 1% 미만, 경상수지 250억달러 내외, 실업률 4.6% 등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면서 IMF 경제위기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 주된 요인은 우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저금리의 정책기조로 전환한 것을 들 수 있다. 금리인하 정책으로 시장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면서 기업의 증가여건 개선, 민간의 자산가치 회복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저금리의 선순환구조가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업인, 근로자,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가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비효율성 및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한 정책당국의 리더쉽 그리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하락, 선진국들의 금리인하 공조 등 대외적인 요인도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거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명든데도 많다. 우리는 고통스런 대가를 치렀으며 많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계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통화확대가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현재화될 우려가 있고,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급보증, 중앙은행의 IMF 차입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으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실상 관치금융의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이 퇴색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오히려 크게 저하되어 미래의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시경제 운영의 방향을 위에서 열거한 부작용을 치유하는데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들 부작용의 치유가 원만치 못할 경우 앞에서의 6%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단지 장미빛 청사진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물가불안은 통화정책의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함으로써 치유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출 방지와 환율안정을 위해 지속되던 고금리 정책기조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시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이후 예상외의 빠른 경기회복과 민간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현재화됨에 따라 저금리 기조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었다.

국내수요의 증가로 수요측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인플레 갭이 점증하는 추세였고 유가상승, 임금 오름세 등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우그룹 구조조정 및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게 될 때까지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로서는 금융시장 안정도모가 최우선 순위였던 점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점차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요와 비용측면에서의 물가 불

안요인들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만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가 진행중이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 긴축은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

둘째로는 금융구조 조정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IMF 2년간 두배 가까이 늘어난 국가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경제운영 기조가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우사태의 여파로 투신권 및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으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IMF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96년말의 명목 GDP대비 11.9%에서 98년말에는 19.5%로 증가하였고 금년말에는 2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가 총채무는 '96년말의 명목 GDP대비 13.7%에서 금년말에는 40.8%로 급증할 전망이다. IMF 구제금융으로 한국은행의 IMF 차입이 증가하였고, 금융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에 해당하는 통안증권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99년말 254조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명목 GDP의 51%에 달하여 국가채무 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제 및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 증가, 공무원 연금의 적자누적,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의 균형회복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수지 건전화에 대한 대책이 긴요하다.

셋째, 정부주도의 금융,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관치금융을 빠른 시일내에 청산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 및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은행 10개, 종금사 19개, 증권사 6개, 보험사 5개가 사라지고 72개 증권기업과 대기업이 워크아웃(기

업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고통스런 구조 조정의 대가로 우리는 경제내의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금융,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관치경제, 관치금융의 행태가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예에서 보듯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위세에 밀려 공적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관치금융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빠른 시일내에 관치에서 벗어나 선진화되지 않으면 기업부실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조정으로 크게 증가한 실업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실업률은 10월 4.6%로 축소되었으나 실망경제활동 퇴출자를 감안할 때 현실적인 실업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약한 공공근로사업, 벤처기업 지원, 신지식산업 등의 지원보다는 민간부분에서의 새로운 창업을 중심으로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건설경기 진작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자생성(내생성)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돌이켜 보면 위기극복을 위한 긴박한 상황속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요구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정부의 지나친 관치경제로 인해 자율경쟁과 책임의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데 있기 때문에, 긴박한 위기국면을 벗어난 이제부터는 그동안 경제의 모든 곳을 받쳐온 정부의 막강한 뒷받침과 간섭을 없애고 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들어내는 일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